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

- 1)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청소년의 시민, 자치권 향상과 인권보장 등)

94.6

1.5

중요하다 ■ 보통이다 □ 중요하지 않다

-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청소년수련활동, 문화예술 및 교류활동 활성화 등)

75.2%

매우 중요하다 ■ 대체로 중요하다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

- 3) 취약계층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 및 농어촌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등) 복지지원 강화

92.2

1

매우 중요하다 ■ 대체로 중요하다 ■ 무응답

- 4) 청소년 가출, 폭력, 성비행, 약물남용 등
예방, 선도, 보호 활동 및 유해환경 정화

94.6

1.5

매우 중요하다 ■ 대체로 중요하다 ■ 무응답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7.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90.8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8.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4.3

19.4

성과가 있었다 보통이다 성과가 없었다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9.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청소년 행정기구 일원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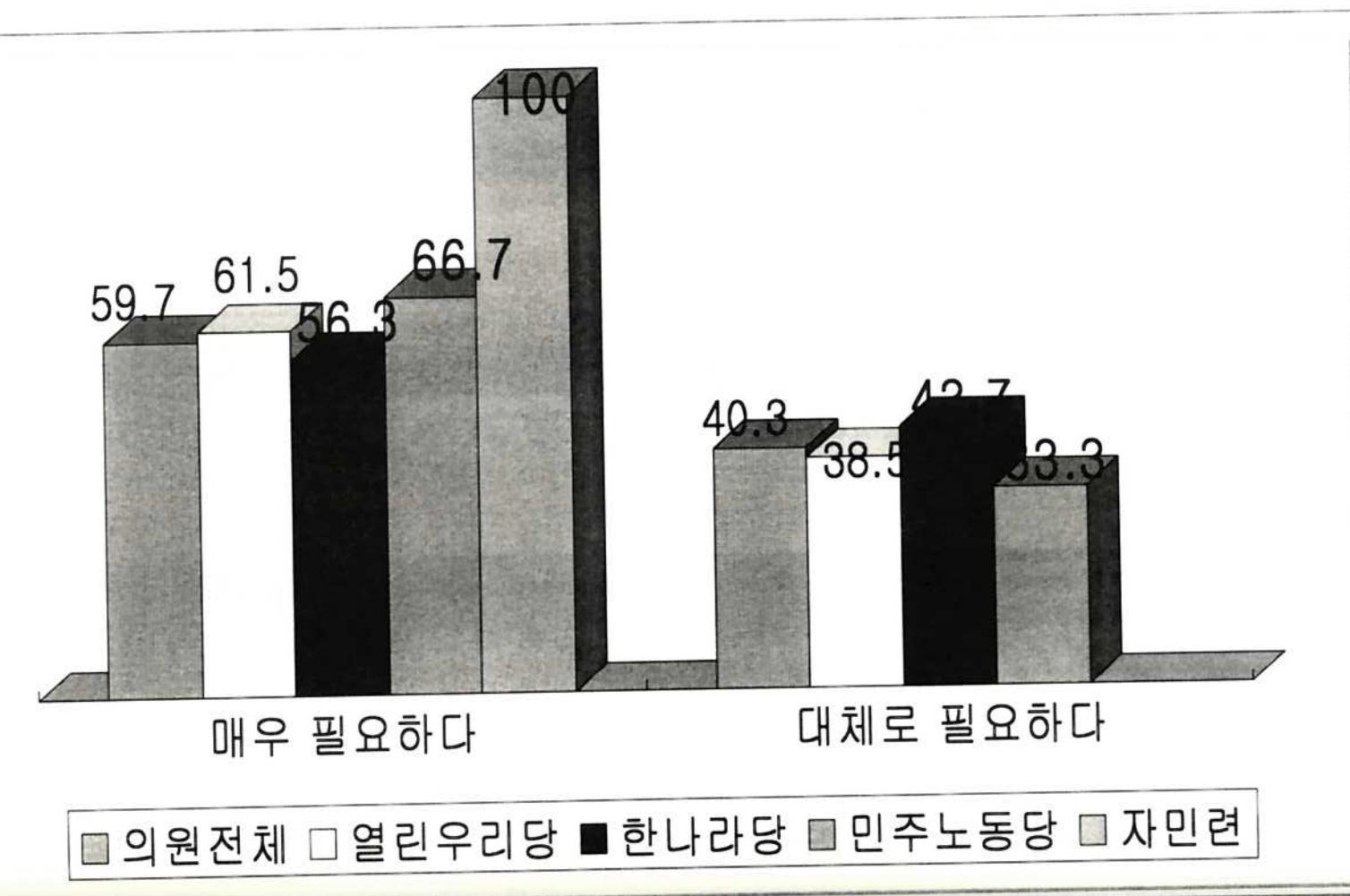
95.1

19
2.9

찬성 반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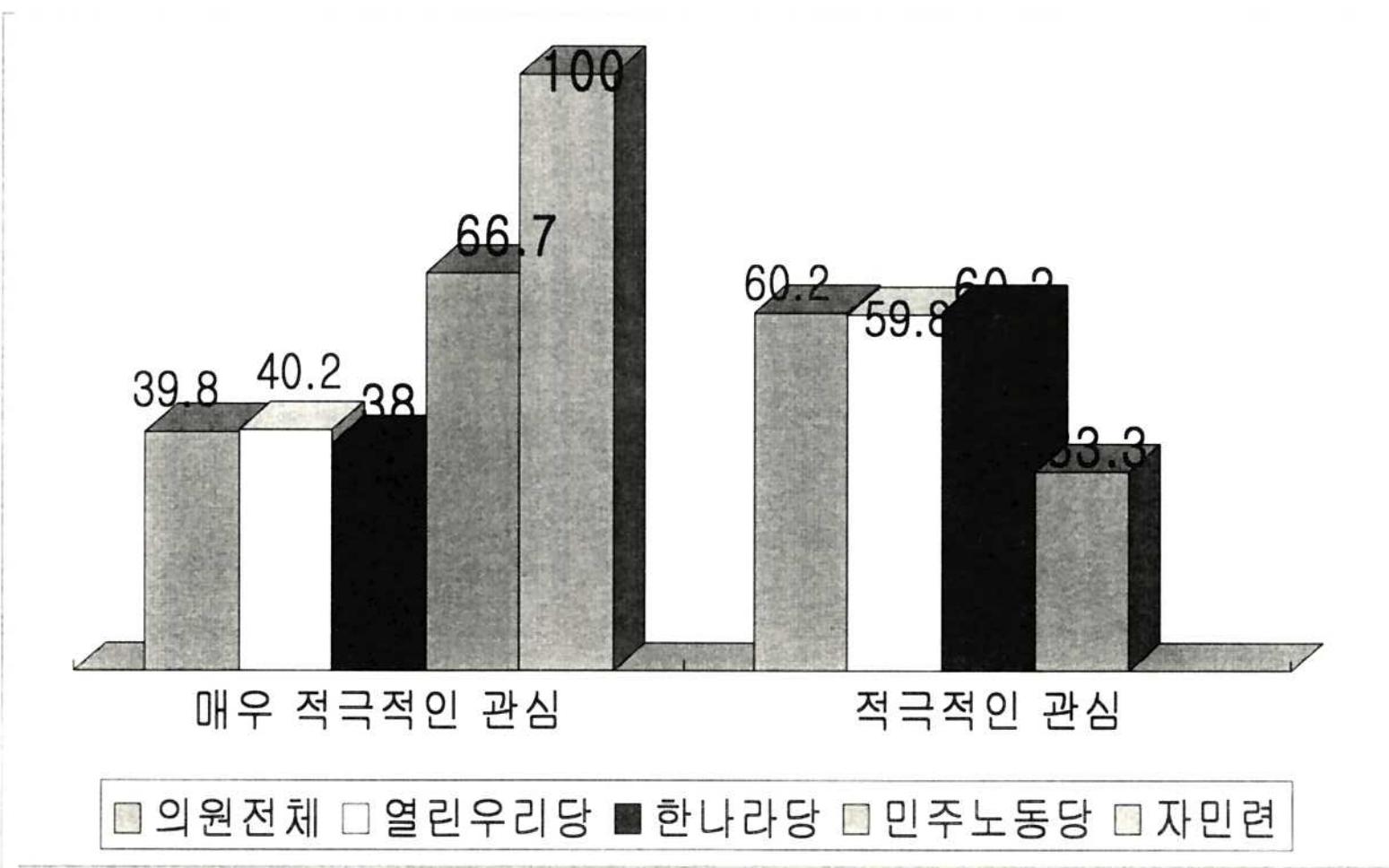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10. 청소년분야의 예산증액



17대 국회 청소년 정책 이렇게 생각한다

11. 의정활동에 있어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



청소년 정책에 대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분야에서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수립과 청소년인권과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 관련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개정으로, 청소년 정책 활성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청소년 인권이 보장받는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이에 17대 국회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정책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기획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137-715)

(☎ 2188-8846 · 8857, Fax : 2188-8819, yjkim@youthnet.re.kr)

1. 다음의 청소년정책을 위한 관련 법, 제도 정책기구, 활동에 대해서 평소 알고 계신 것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청소년기본법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 ③ 청소년복지지원법 |
| ④ 청소년보호법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 ⑥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 ⑦ 한국청소년개발원 | ⑧ 한국청소년상담원 | ⑨ 청소년헌장(1998년 개정) |
| ⑩ 청소년(자치) | ⑪ 유엔아동권리협약 | ⑫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 |
| ⑬ 청소년수련시설 | ⑭ 청소년지도사 | ⑮ 청소년증 |

2. 청소년권리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을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들에게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아르바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화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청소년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보장받고 있다(☞문5번으로)
- ② 대체로 보장받고 있는 편이다(☞문5번으로)
- ③ 그저 그렇다(☞문5번으로)
- ④ 보장받고 있지 못한 편이다(☞문4번으로)
- ⑤ 전혀 보장받고 있지 않고 있다(☞문4번으로)

4.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 부족
- ② 청소년 권리의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 부족
- ③ 입시제도 및 과다한 학습과제
- ④ 청소년을 미숙하고 통제 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
- ⑤ 청소년의 권리행사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부족
- ⑥ 기타 ()

5.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권 부여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 외국의 경우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16세 하향화는 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사회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16세
- ② 만 17세
- ③ 만 18세
- ④ 만 19세
- ⑤ 현재 그대로 유지(만 20세)

6. 다음의 청소년정책 과제들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①, '대체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②,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 항	매우 중요 하다	대체로 중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중 요하지 않다	전혀중 요하지 않다
1)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청소년의 시민·자치권 향상과 인권보장 등)	①	②	③	④	⑤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청소년 수련활동, 문화예술 및 교류활동 활성화 등)	①	②	③	④	⑤
3) 취약계층 청소년(저소득층, 장애 및 놓어촌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등) 복지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가출, 폭력, 성비행, 약물남용 등 예방·선도·보호활동 및 유해환경 정화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대체로 중요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8. 그동안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과가 매우 많았다
- ② 성과가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성과가 없는 편이다
- ⑤ 전혀 성과가 없었다

9. 현재 청소년행정기구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집행을 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부의 청소년행정기구 일원화에 대한 의견은?

- ① 찬성
- ② 반대
- ③ 기타 ()

10. 청소년정책분야 예산은 약 0.02%로 교육정책분야 예산(약 5%)의 1/250 정도에 불과합니다. 향후 청소년정책 수행을 위한 청소년분야의 예산 증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여가문화활동과 소외계층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문제 예방, 인권과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성과 덕성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향후 청소년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겠습니까?

- ①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
- ②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 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대 총선 청소년분야 공약 비교·분석

윤 철 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

17대 총선 청소년분야 공약 비교 · 분석

1. 청소년의 삶,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

- 청소년정책의 목적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개발과 육성에 있음
- 청소년정책의 목표
 - 청소년의 삶과 건강한 성장을 억압하는 사회제도적 요인의 규명 · 제거와 동시에 청소년의 자율적 · 주체적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사회인프라 구축, 사업개발 및 지원에 있음.
- 청소년정책의 범주
 - 넓게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영역, 건강과 안전, 가족, 고용과 노동, 교육과 학습, 문화와 여가, 시민적 권리,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취약계 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함.
 - 좁게는 정부 청소년정책 실무 부서인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입안 · 실행되는 정책을 의미함.
- 청소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 청소년정책 실무 부서의 정책이념과 방향을 중핵으로 하여,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책의 수립에 청소년 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행체계가 필요함.
 - 즉,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책에 대한 청소년 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과 통합이 필요함.

2. 17대 총선 청소년분야 공약의 비교·분석

□ 총선공약을 바라보는 관점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 성인사회의 청소년관 : 미성숙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 청소년기는 미래를 위해 학습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로서, 어떤 학습과정이더라도 잘 감내하고 성취해나가는 청소년이 최고의 성공모델임. 청소년을 대학입시경쟁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육하고 있는 사회
- Youth Voice와 Empowerment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대해 청소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권한 부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 영역에서 청소년 인권의식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가 분석기준이 됨.

□ 분석 참조자료

○ 각 당 총선공약 비교에 참조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열린우리당정책위원회(2004. 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0415 열린우리당의 약속.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2004. 4), 50가지 희망이야기.
- 민주노동당(2004. 3. 11),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 민주노동당(2004. 5. 17),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pangari.net)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2004. 3. 17), 3당정책위의장초청정책토론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04. 3. 24), 17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 2004총선시민연대(2004. 4. 12), 2004년 17대 총선 정당정책평가발표 기자 회견.

○ 각 당 총선 공약 비교에 참조한 자료의 수준이 달라, 누락된 부분 있을 수 있음.

- 특히, 새천년 민주당의 경우 정책위의장 정책토론회와 2004년 5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 가능한 자료만을 참조하였으므로 누락가능성이 큼.

□ 17대 총선 각 정당 청소년분야 공약 비교

1. 정치·정책 참여

열린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인하, 총선 후 만 19세로 변경 ·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회' 운영 활성화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연령 만 18세 인하는 민법 개정 전 까지는 곤란 (민법상 성인연령은 20세)
민주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연령 만 18세 인하
새천년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연령 만 18세 인하

▶ 한나라당 외 3당 모두 선거권 연령 인하에 동의하고 있음. 열린우리당은 청소년의 정책참여 제도화를 공약함.

2. 고용 확대 및 노동권

열린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실업해소 종합프로그램: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해외 인턴, 연수확대 · 임시직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봉사인턴제 ·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 촉진법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인력창출: 정부투자기관 등 정원 3% 신규채용, 재난·치안·복지부문 공공인력 확충, 지방대학졸업자 의무채용 · 청년해외전문인력 양성: 청년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해외연수과정 지원 · 숲가꾸기 공사 설립: 관련전후방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 향후 5년간 청년일자리 56만개 창출
민주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신규설업자 의무고용제 도입 · 근무시간, 주요 업무, 휴일·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청소년 표준 근로계약서 제정, 청소년 고용 시 작성 준수 · 부모동의서 폐지로 만13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권 보장 · 청소년 취업금지 업종(유홍업, 육체적으로 위험한 직업 등) 지정으로 안전망 구축
새천년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평화봉사단파견 - 경찰, 소방관, 119구조대, 사회복지사, 교사등 증원 · 인턴사원 채용확대: 민간, 공공부문 · 청년해외취업지원 종합체계 구축: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 설립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음.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공부문 고용확대(사회복지부문 포함)와 해외부문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 임시직 일자리 창출(인턴, 자원봉사인력)로 요약됨. 민주노동당은 청년신규실업자 의무고용을 공약하고 있으며 청소년노동권 보호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청소년표준근로 계약서작성 준수를 공약함.

3. 문화·여가 향유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존 지정·운영 · 청소년여행벨트 프로그램 개발·보급 · 문화예술 교과과정 및 평가지표 개발·보급
한나라당	-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 : '수련'개념 버림, '청소년수련관'대신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 · 학생의 쉴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보충학습, 자율학습, 학원 등을 포함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학습 강요 제한 - 일정 시각 이전의 학교 등교 강요 제한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은 저녁 9시 이후 교육활동 금지 ·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한 청소년문화활동과 참여활동 증진 ·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사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문화와 복지관련사업 적극 추진 - 지역관련단체 협의체 구성
새천년 민주당	-

▶ 청소년문화·여가 향유는 청소년분야 고유정책영역에 해당됨.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는 청소년문화와 여가향유와 관련된 공약이 발견되지 않음. 열린우리당은 단편적인 몇 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을 뿐임. 민주노동당은 학생의 여가에 관한 권리의 인정,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방안 제시 등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4. 시민적 권리

열린 우리당	-
한나라당	-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법제화 및 민주적 생활규정 마련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출판 및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참가의 권리, 학생관련 규정에 대한 의결의 권리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새천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할 권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권리, 정보접근권리를 보장 · 권리 못지 않게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책임, 남녀 평등가치와 소외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화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공약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사회의 건강성은 시민의식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때 청소년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문제로 보임. 새천년 민주당은 포괄적 수준에서 청소년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선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민주노동당은 청소년의 삶의 주요 영역인 학교에서 학생회 법제화, 자치활동 활성화 등 시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청소년보호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폭력전담기구 설치, 아동학대예방 및 구제시스템 구축 · 학교전담 경찰 · 소방관 담당관제 도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약물, 폭력, 성 비행 근절 및 유해한 정보환경 개선 ·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 찬성 · 미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미아실종 아동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 청소년전용 법률상담전화 신설, 청소년법률 상담사이트 개설: 청소년인권침해 예방, 피해 구제 ·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 반대 · 복지경찰제 도입: 가출 청소년 등 청소년보호를 위해 경찰업무와 복지서비스를 겸하는 복지경찰제 도입, 경찰인력 중 관련 과정 이수하게 하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자경단 프로그램 : 재향군인회, 경우회 등 퇴직공직자단체와 청년실업층을 청소년보호에 참여시킴 · 실종자 찾기 지원 및 보호체계 강화: 실종자 찾기 지원 및 보호기본법 제정 · 청소년성범죄자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 찬성
민주 노동당	<p>▶ 열린 우리당은 학교전담 경찰 · 소방관제 도입과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아동성 폭력과 학대예방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언급만 하고 있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공약이 없음. 민주노동당은 사회규제법인 청소년보호법 대신 청소년인권보호법으로의 대체와 청소년법률상담체제구축을 공약함. 새천년민주당은 시민자경단을 통한 보호인력 증대를 공약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 청소년전용 법률상담전화 신설, 청소년법률 상담사이트 개설: 청소년인권침해 예방, 피해 구제 ·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 반대 · 복지경찰제 도입: 가출 청소년 등 청소년보호를 위해 경찰업무와 복지서비스를 겸하는 복지경찰제 도입, 경찰인력 중 관련 과정 이수하게 하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자경단 프로그램 : 재향군인회, 경우회 등 퇴직공직자단체와 청년실업층을 청소년보호에 참여시킴 · 실종자 찾기 지원 및 보호체계 강화: 실종자 찾기 지원 및 보호기본법 제정 · 청소년성범죄자 얼굴을 포함한 신상공개 찬성
	<p>▶ 열린 우리당은 학교전담 경찰 · 소방관제 도입과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아동성 폭력과 학대예방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언급만 하고 있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공약이 없음. 민주노동당은 사회규제법인 청소년보호법 대신 청소년인권보호법으로의 대체와 청소년법률상담체제구축을 공약함. 새천년민주당은 시민자경단을 통한 보호인력 증대를 공약함.</p>

6.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 강화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非학생의 차별철폐
	-
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교도소 내부 '문화의 집' 설립 ·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의 집' 확대 건립: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을 위한 도서실,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어린이 교실, 자녀양육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 교육기회제공과 방과후 한국어 교실, 국제 이해 교육 실시 등으로 이주노동자 학교적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복지기본법' 제정 : 학교사회복지제 도입,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학교부적응 돋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종합복지관 설치 :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새천년 민주당	-

▶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모두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이 없음. 열린 우리당의 공약은 학생과 非학생 차별철폐라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민주노동당만이 범죄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이주노동자자녀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공약. '학생복지기본법' 등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공약

7. 가족·보육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가족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정 긴급구호체계 마련, 아동학대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확대 - 저소득 이혼가정 양육비 지원, 빈곤가정 아동, 여성지원 · 빈곤아동 ZERO 정책: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사업 확대 · 만 5세아, 장애아, 입양아에 대한 무상보육실시 ·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빈곤가정 해체예방을 위한 가족수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시 의무상담제 도입: 30시간 상담의무화, 양육권·양육비 합의 · 차상위 계층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보육비 등 부분급여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화 · 보육수당을 보육료 수준으로 현실화 · 환승전철역내 보육시설 마련 · 부모공동육아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학교급식제도, 방과후 아동보호시설 확충
	-
	-
	-

▶ 열린우리당은 위기가정 구호체계 등 가족정책과 빈곤가정 보육 및 수당 지원, 취약지역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정책 공약, 한나라당은 차상위 계층으로 복지지원 확대, 300인이상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정책 공약, 민주노동당은 보육시설 외 학교급식제, 방과후 아동보호시설 등 학령아동보호에도 정책적 관심

8. 청소년재정 및 행정

열린우리당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확대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
새천년민주당	-

▶ 열린우리당만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확대 등 청소년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짐

□ 17대 총선 각 정당 교육분야 공약비교

○ 교육정책은 청소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교육정책의 방향이 청소년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의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함.

1. 학교정책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평준화제 보완 : 공립학교 증설,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 확대, 교과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 자립형 사립고·특목고 확대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평준화 정책 점진적 개선 필요 · 선지원·후배정 제도 확대 · 특목고 3% 수준으로 확대 육성을 통한 과학, 외국어 인재 양성,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 확대 ·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 · 사립학교 자율권 확대 ·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강화(원어민 영어연수학교를 운영) · 수능시험 2회 실시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의 실업계/일반계 계열과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구분 없애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 고교평준화의 전국화, 내실화 · 단계적 완전 무상교육 실현 · 수능 폐지, 졸업자격고사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프로그램 특성화·다양화하여 선택권 증대 · 고교 평준화 유지, 내신중심 대학입시제 · 특기·적성 교육 등 공교육 내실화 · 외국어교육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1인 1외국어 습득 - 영어 외 중국, 러시아, 스페인, 일본어 강화 - EBS 대중언어교육 개편 · 학교평가제 실시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프로그램 특성화·다양화하여 선택권 증대 · 고교 평준화 유지, 내신중심 대학입시제 · 특기·적성 교육 등 공교육 내실화 · 외국어교육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1인 1외국어 습득 - 영어 외 중국, 러시아, 스페인, 일본어 강화 - EBS 대중언어교육 개편 · 학교평가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프로그램 특성화·다양화하여 선택권 증대 · 고교 평준화 유지, 내신중심 대학입시제 · 특기·적성 교육 등 공교육 내실화 · 외국어교육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1인 1외국어 습득 - 영어 외 중국, 러시아, 스페인, 일본어 강화 - EBS 대중언어교육 개편 · 학교평가제 실시

2. 사교육 대책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내실화: 수업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감소 · 수준별 보충수업 등으로 사교육 수요 흡수 · 입시위주교육 해소하고 취미와 특성에 맞는 비교과활동 활성화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로 사교육 수요 감소 · EBS 인터넷강좌 활성화 (2004년 200억 확보) · 학교에서 특별과외 실시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경쟁 완화, 대학서열화 체제 극복 등으로 사교육 수요 차단
새천년 민주당	-

3. 대학교육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제도: 학교교육결과의 비중 높임 · 학생선발제 개선 · 대학특성화: 구조조정 · 지방대학육성 · 이공계분야 출신 국가적으로 우대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정책 완전자율화 · 이공계 학생과 기업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제도를 고교자격고사제로 전환, 일정 자격 있으면 진학 가능 · 모든 국공립대 통합 선발제도 시행으로 대학간 서열화 타파 · 국공립대 통합으로 점진적 대학무상교육 · 모든 대학의 특성화 · 평준화 · 이공계열 대학원생에 대한 고용계약 의무화
새천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자율화 · 이공계 대학 우대정책 · 대학의 자율화 · 특성화 지원

▶ 학교교육 및 대학정책에 관한 공약을 볼 때 한나라당은 수월성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의 교육정책 지향.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확대, 대입정책 자율화 등 교육경쟁의 강화와 고교평준화 해체를 촉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치열한 교육경쟁 속에 강화되어 온 사교육에 대해서도 특별과외, EBS 수능방송 등 사교육 수요를 학교교육이 담당하는 방향의 교육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경쟁위주 교육으로 폐폐화되고 있는 교육풍토 속에 학교교육과 학습의 질 개선을 위한 공약은 발견되지 않음.

- 열린우리당은 고교평준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수업방법 등 학교교육과정 운용 방식 변경,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공교육 개선, 대입제도에 학교교육결과의 비중을 높이는 등 학교 입지를 강화하려는 입장. 수준별 보충수업 등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차단하려는 개혁적 입장임. 입시위주 교육 해소와 비교과교육 활성화 등 교육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새천년 민주당도 열린우리당과 유사한 입장에 서 있음.

- 민주노동당은 중 · 고등학교, 일반 · 실업고의 학교통합, 국 · 공립대 통합선발제 등으로 학교 · 대학개혁을 통해 교육경쟁의 원천인 대학간 서열화를 타파하려는 급진적 입장에 서있음. 학교와 대학개혁을 통해 교육경쟁과 사교육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

- 치열한 교육경쟁구조는 청소년의 삶과 인성을 폐폐화시키고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불가능하게 할 뿐더러 시민성과 공동체성의 함양을 어렵게 해 사회발전의 기초를 위협하게 됨.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학교교육개혁 방향은 학생간 교육경쟁은 완화시키면서 교사와 프로그램의 질은 높이는 방향이어야 함. 민주노동당은 교육경쟁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간 서열화를 없애는 대학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3당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

4. 교육복지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5세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저소득층 3~4세아 교육비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 무상교육 확대 농어촌 교육환경개선: 농어가 고교생 교육비 전액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소규모학교 운영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 지원 쿠폰제 도입: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시설 선택권 보장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입학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우수인재의 국가책임 의무교육제 국민기초학력보장제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세~5세아의 '교육복지형 학교체제' 마련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 교육 활성화 소외계층(장애인, 여성, 농촌)의 학습보장, 이주노동자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설립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유급학습휴가 실질화 지역국립대학 전형에 농어촌 학생비율 대폭 확대 교육부에 학생복지, 자치지원국 신설, 학교에는 학생복지부 신설 학생의 인권과 자치를 신장 학교스포츠 정상화 학교복지환경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 복지, 시민단체와 교육청 연계시스템 마련 학교복지체제 위해 보건교사·사서교사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1인 배치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교육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학교 무조건 통폐합 중단 - 농어촌 고교생의 학자금 전액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 - 농어촌 출신 자녀의 특례입학을 확대 - 사대출신 교사의 농어촌지역 근무시 병역특례 적용 - 농촌지역 교사에 대해 가산점 등 인센티브제 도입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의 지원대상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지역정보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
새천년 민주당	

▶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과 저소득층 우수인재에 대한 선별적 교육보장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열린 우리당은 저소득층과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복지강화, 새천년민주당은 농어촌교육에 대한 지원을 제시함. 민주노동당은 전 계층에 대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 농어촌지역과 소외계층, 이주노동자, 근로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뿐 아니라 학교현장의 학생복지 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실업·직업교육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직업교육 인프라구축: 직업진로지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계 전면 무상교육 실업계고의 50% 수준으로 특성화고 확대
민주 노동당	
새천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직업교육강화

▶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고 교육소외지대로 남아 있는 실업계 교육에 대해 한나라당은 무상교육과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선언적 수준의 공약에 머무름. 일반/실업 학교통합을 제시하는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한 공약이 없음.

6. 교육행·재정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혁신 특별법제정 · GDP 6%수준으로 확대 · 학교중심 교육자치 실현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투자 GDP 7%까지 확대 ·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제 · 학교단위 자율권확대 및 교장 책임경영제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민주적으로 개정, 사학비중 축소 · 교육행정 민주화로 교육비리 척결 · 국가교육위원회설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교육개혁 의제 선정 · 교육부는 교육정책 집행기구, 교육청은 지원센터화, 학교운영은 단위학교로 권한 이양 · 교육주체 참여로 학교자치실현
새천년 민주당	-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교육재정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재정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한 공약이 없음. 학교운영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3당이 일치하고 있음.

7. 교원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법정 정원확보 · 교원보수체계정비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면평가를 활용한 교사평가제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2배 증원과 교원 전문성 향상으로 교육의 질 향상
새천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증원

▶ 교원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평가제를, 타 3당은 교원증원을 공약으로 제시함.

8. 교육환경

열린 우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수 축소 · 노후 학교시설 개선 · 보건교사배치 및 학교급식체계개선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대책위원회 내실화: 식약청의 참여방안 제도화, 학교직영 급식방식 전환, 학교급식영업의 허가제 전환 검토
민주 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환경을 교육적으로 재구성 - 학교시설 기준 정비: 상담실, 도서실, 온수공급시설, 냉난방시설, 장애교육실 등 · 학교급식법 개정
새천년 민주당	-

▶ 교육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노후학교 시설개선, 민주노동당은 교육환경의 교육적 재구성을 제시함.

○ 학습은 청소년 삶의 주요 구성분으로서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질 낮은 교육경쟁구조는 청소년의 삶을 경쟁에 매몰시켜 다양한 교육경험을 불가능하게 함.

-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고 경쟁을 가속화하는 교육체제 속에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EBS 수능에는 막대한 예산이 동원되지만 소외계층 청소년과 대안교육을 위한 교육투자, 청소년정책을 위한 예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부족하기만 함.

-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의 강조 속에 교육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교육정책은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설 자리를 상실하게 하고 있음. 총선공약을 통해 볼 때 한나라당은 청소년정책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청소년보호와 복지 등 청소년정책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새천년민주당은 선언적 수준에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단편적인 몇 개 청소년사업만을 공약하고 있을 뿐임. 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에 대한 의지가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민주노동당은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을 남김.

3. 맷음말

○ 한국사회의 건강지표 : 청소년집단의 반란

- 청소년은 기성사회에 대해 진보적, 개혁적 의식을 소지하고 있는 인구집단임.
- 성인사회는 청소년을 교육과 입시라는 우리에 가두고 선택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 안에서 편식을 강요받고 있는 청소년은 비만에 시달리고 있거나, 마땅히 먹을 것이 없어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참다 못해 아무 대책 없이 우리 밖으로 뛰쳐 나오고 있음.
- 어른들은 계속 청소년을 가두는 우리를 튼튼히 보수하고 편식을 강요할 것인가? 병들어 신음하기 보다 반란을 일으키는 청소년이 늘어갈 때 오히려 우리사회의 건강과 발전이 담보될 것임.
- 따라서 제반 사회 영역에서 청소년의 반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줘야 할 것임.

○ 청소년분야의 취약성 :

- 청소년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 국회의원의 청소년관련 법률인지도 : 청소년기본법(89.8%), 청소년보호법(88.3%) 외 청소년활동진흥법(29.6%)과 청소년복지지원법(35.9%)은 30% 내외만이 인지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청소년행정기구 인지도 : 청소년보호위원회(86.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59.2%)
- 국회의원의 청소년현장 인지도 : 청소년수련시설(82.0%)외에 청소년지도사(27.7%), 청소년증(50.5%), 청소년위원회(37.4%) 등
- 청소년 행정기구의 취약성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원화로 인한 힘의 분산
 - 문화관광부내 청소년국 위상위 문제
 -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부처 총괄예산제는 청소년분야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청소년정책의 든든한 후원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17대 국회에 기대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원, 감시

[자료]

□ 청소년관련 3개 법의 주요 사항

1) 청소년기본법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시책을 심의, 시·도 및 시군구 소속하에 둠

○ 청소년특별회의

-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특별회의를 매년 개최

○ 청소년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로 유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

○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시설 및 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를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 그 활동비를 보조.

- 학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수등 필요 경비 보조.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안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도

○ 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는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증진,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가능, 개인 및 법인의 재산 출연 가능,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 가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종합관리 및 제공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들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산범위내에서 경비 일부 보조

○ 청소년활동 및 복지

- 학교교육과의 연계노력, 정신·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 배려
- 청소년 가출 및 비행예방, 유익환경조성(청소년의 정보화역량 배양, 유익매체물 제작, 보급 장려 등,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청소년유해환경 규제(유해매체, 유해업소, 폭력, 학대, 성매매 등 유해행위)
-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사용
 - 청소년활동,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단체운영,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 청소년육성정책의 과학적 연구, 기금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관할구역 안의 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가능

2)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단체는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하여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
- 청소년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치
 - 청소년활동정보 수집 및 제공, 수련활동인증제 운영,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교육과의 연계체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 수련시설(수련관,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이용시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문화의 집 설치운영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 사전검토: 수련시설의 입지조건,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심의 후 시행
- 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등의 승인 시 수련시설 포함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설치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 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활동지원본부에 설치, 운영
- 청소년 이용시설,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는 인증위원회에 인증요청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 시도지사는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자연경관 수려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가능
- 시도지사는 수련지구 지정시 수련지구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법인과 단체도 시도지사의 승인하에 수련지구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소년교류활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 시행해야하며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의 교류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 체결시 청소년교류활동 포함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청소년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 활동의 지원 가능
- 교포청소년 모국방문 및 국내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교류사후활동 지원, 남북청소년교류기반 조성 및 통일교육 실시

○ 청소년문화활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관련기관,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전통문화의 계승, 청소년축제의 발굴,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지원

3)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 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의견수렴해야 함.
- 청소년에 대한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 의 시설이용료 면제나 할인(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으로 증명)

○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위탁가능
- 지원내용 :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등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
-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보호

정당별 공약사항 분석 자료집

윤영현·박은영
(청소년기획팀)

정당별 공약사항 분석 자료집

1. 정당별 공약사항 분석 자료집에 대한 의도

- 선거때마다 청소년 공약은 선심성과 구체적이지 못한 선언성 정책들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관심 부족도 있겠지만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무관심 했었다라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부터는 청소년들이 직접 각 정당들이 지키겠다고한 청소년 정책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청소년 입장에서 어긋난 정책들은 바로 잡아주고, 정책들이 올바르게 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비교 분석의 방향

- 기존의 총선연대 정책평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평가와 유사한 맥락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집중 비교 및 분석.
-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평가 및 검토
- 선언성 의미의 청소년 정책 지적
-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청소년관련 법률 보안

3. 정당별 공약 분석

1) 교육정책

민주노동당	대학교육	이공계열 대학원생에 대한 고용계약 의무화
		모든 대학을 특성화·평준화
		대학등록금, 우선 동결해야 한다
		대학 교육의 공공성 실현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을 통합 대학서열을 완화,
	중고등 교육	수능을 폐지 출업자격고사를 시행
		고등학교의 실업계/일반계 계열구분과 특목고·자립형 사립고를 없애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사교육비 근본 대책
		고교 평준화의 전국화·내실화 추진!
		학교급식법 개정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보장 및 혜택	교육행정 민주화 심각한 교육비리 척결
		단계적인 완전 무상교육 실현
		7차 교육과정의 틀을 폐기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
		교육개방 저지
	교원	만3세~5세아의 '교육복지형 학교체제' 마련
		공공의 평생교육체제 수립
		학생의 인권과 자치를 신장(법적, 건강권 청소년 사업)
		학교복지환경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구조 마련과 교육자치·학교 민주화 실현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학교스포츠의 정상화
		소외계층(장애인 여성 농촌)의 학습보장
		교원 약 2배 증원과 교원전문성 향상으로 교육의 질 상승

새천년민주당	대학교육	이공계대학 우대정책
		대학 자율화
		대학의 특성화·자율성 지원
		대학교육의 질 향상
	중고등 교육	고교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
		진로·직업교육을 강화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
		특기·적성교육 등 공교육을 내실화
	교육시스템	사교육 문제(EBS수능방송)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
		외국어 습득기회를 확대(EBS 중어학교육, 다양한 대중적 외국어인프라를 확보)
	교원	학교평가제를 시행
		교사를 증원
열린우리당	대학교육	(이공계 우대) 이공계 분야 출신을 국가적으로 우대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
	중고등 교육	고교평준화제도 보완(공립학교 증설,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 확대, 교과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실업교육의 개혁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교육보장 및 혜택	교육환경 개선
		교육혁신법 제정과 교육재정 확충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교육비 지원의 대폭 확대
		학교중심의 교육자치 실현(학교자치 관련 법률을 재정비)
		평생교육체제 확립
		실효성있는 인적자원 개발
교원	교원	유아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의 확대(장애인 교육)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사학운영의 개선
	교원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개선
		교원의 복지 확대
	교원인사제도	교원인사제도 개선(교원, 학교장)

대학교육	이공계 진학을 장려
	수능을 연2회 실시하고 대입반영 비중을 축소
	대학에 과학 영재를 위한 특별전형 기회를 확대·권장
	대학입시제도를 수직계열화
	권역별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
	소수 학생을 선발·육성(특성화된 전문대를 설립·지원, 전문 직업기술 양성기관으로 육성)
	기여·기부금 입학제를 정책적으로 실시
	자립형 사립학교를 더욱 확대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
	학교교과과정의 특기·적성별 교육을 강화
중고등 교육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를 제공
	실업계고교의 명칭을 「전문인 고등학교」 등으로 개칭
	실업계 고교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매년 연차적으로 확충
	「기초과학 육성위원회」를 구성
	「패키지 장학지원제도」를 실시하여 기초학문의 학문후속 세대를 육성
자민련	여성 직업교육의 활성화
	학부모의 교육적 참여 확대
	우수인재를 교직사회로 유인
	체벌 기준과 절차를 법규에 규정
	수준별 보충학습 인프라를 강화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
	집단따돌림문제를 근절
	「사립학교법」을 제정
	교원 전용 종합의료기관을 설립·운영
	교원양성기관 통·폐합
교원	교원 임용고시의 전문화
	교사에 대한 안식년제를 실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선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을 권장

한나라당	대학교육과 기업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대입정책을 대학에 일임하는 완전자율화 정책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
	실업계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
	특수 목적고를 확대 육성하여 학생과 학부형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
	사립학교 자율권 확대
	학교에서 특별과외 실시 (EBS를 활용, 학교시설을 활용한 입시과목위주의 특별과외)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를 대폭 확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
보장 및 혜택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시설 선택권을 보장
	우수한 인재의 '국가책임의무교육제'를 실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강화 (원어민 영어연수학교를 운영)
	학교특성 및 지리적 조건에 따라 「선지원·후배정」 방식을 확대
학교운영	교장 책임 경영제, 학교위 자율화 강화
	교육위원·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실시

○ 교육 부분에 있어서 각 정당의 집중도는 다양하다. 일단 5개 정당 모두 일치를 보인 것은 “이공계 우대, 공교육의 활성화, 농촌교육의 지원, 실업계교육 보장, 교원수의 증가, 사교육문제에 따른 대안점” 등이 있다. 이공계 우대 정책 부분은 각 정당마다 목표는 같으나 하나같이 그에 따른 방향점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공계에 따른 혜택은 (한나라당-병역특혜, 민주노동당-고용계약의 의무화, 민주당-과학기술에 따른 지원, 열린우리당-국가차원의 혜택 자민련-이공계 지원의 장려) 등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각 정당별 교육정책을 비교하면서 두드러지게 느낀 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주 또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교육의 본질을 “교양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보고 정책을 배움의 기회확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부분까지 확대 분석 및 대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

주당과 한나라당은 “인재중심의 교육정책”이라고 볼수도 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주요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우나 기타 소외받는 학생들의 측면까지 확대 분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 or 확대, 그리고 수능시험의 폐지 or 연 2회 실시, 고교 평준화의 폐지 or 찬성 부분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은 결론만 제시할 뿐, 그에 따른 근거나 이유가 공약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서 단순한 선언적인 인상을 받았다. 또한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 확실한 교육공약의 모습은 다소 미흡한듯 하고 강화나 내실화방안 없이 ‘보완’의 측면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한나라당의 정책에는 ‘특정 집단 특히 교육계 기득권층이나 상위계층에 편향된 정치 정책이 다수인 것이 들어나는 듯하다.

▶ 교육정책을 총괄 분석하면서

공약사항 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 어떤 방법으로 → 하겠다. 라는 것을 투표권을 가진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책보고서라고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하겠다~하겠다”식의 선심 및 선언적인 느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출수가 없었으며 “무엇을 어떻게?”라는 의문은 떨칠 수가 없었다. 또한 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 및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특정집단의 서열화” “교육은 생산력의 주체”로 국한되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이끌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정책보다는 새로운 또 다른것을 계발 및 지원하려는 정책방향을 보면서 정책과 교육의 대상자와는 서로 다른 관계인거처럼 인식된다. 현실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현실문제를 분석하면서 그에 따른 다방면의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여 만들어지는 정책, 그러한 정책의 수립과정이 되어지길 이번 17대 국회에 기대해본다.

2) 청소년 정치·경제 참여보장 정책

민주노동당

▶ 청소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현황

- 현행 청소년 관련 직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의회 등으로 나뉘어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유해환경·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둠
-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청소년 의회는 지역사회의 의정과 청소년 가치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이나, 청소년 의회와 지역 의정 사이의 결합은 의무적이지 않음.

□ 공약

○ 청소년위원회 설립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를 통합, 대통령 직속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 정책을 수립·검토 : 청소년위원회 위원의 30%를 청소년 대표로 충원

○ 지역 청소년의회 지원

- 지역 청소년 의회에서 발의된 지역 조례 등 법안에 대해 지역 의회가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검토,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 지역 청소년 의회 의정활동에 지역 예산 배정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의 주체가 되며, 청소년들의 실정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됨

▶ 청소년 연령 규정을 통합하고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황

- 2003년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개별법들에서 현행 청소년 연령이 혼란스럽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행정이 어렵고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 현행 개별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

법률명	민법	선거법	병역법	도로교통법	청소년 보호법	영상3법
성인 연령	20세	20세	17세	19세	18세	18세
내용	법률행위 가능	투표할 권리	자원 입대	징병 검사	운전면허 가능	보호대상 제외

* 영상3법 (음비계임법, 영화법, 공연법)

* 기타 부모동의로 혼인가능연령(남18세, 여16세), 취업가능연령(18세), 아동복지법 복지대상 제외연령 (18세이상), 소년법상 성인(20세) 등

법률명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연19세미만	만 9세~24세	만18세미만

- 2003년 1월 2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보호연령기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 영상 3법의 18세 규정을 19세 규정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청소년 운동 단체와 문화 운동 단체들의 비판을 받음
- 현재 세계 98개국에서 선거연령이 18세로 책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 제정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규정이 변화하지 않고 있음
-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청소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 공약

- 영·유아기, 아동기와 구별되는 청소년기(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규정을 통일
 - 만 18세 이상 성인들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조화
-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인권법', '청소년문화진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현황

- 97년 7월 시행되고 2002년 8월 일부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애초에 "청소년을 음란, 폭력적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은 이제까지 사실상 유해매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으로 기능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인권, 문화, 교육, 복지 등의 대상과 영역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업무의 중복성을 낳는다. 청소년들의 인신매매나 매매춘을 근절시키고, 가정에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은 일선 검·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며,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를 위한 법으로 기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결코 청소년들의 권리전반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권을 보호하는 청소년인권보호법과 청소년문화진흥법으로 대체돼야 한다.

▶ 공약

○ 청소년보호법 폐지

-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총괄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심의 기관에서 해당 매체의 특성에 따라 등급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충분
- 10대 윤락행위 방지와 약물남용방지에 관한 규제조항은 현행 '형법'이나 '향정신성약물관리법'으로 대체
- 불법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매체에 대한 규제 및 청소년인권, 노동권유린행위에 대한 단속은 일선 경찰이나 검찰이 수행.

○ 청소년인권보호법 ·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

- 무엇보다도 청소년보호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가정과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인권과 교육권과 문화권을 보호하는 것임.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참여활동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문화진흥법'의 신설 필요
- 또한,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용어를 정리할 필요성 있음. 현재의 상황에서 '수련'이라는 개념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으므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말 대신,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또는 청소년문화의 집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현황

- 현 최저임금법에서는 18살 미만 청소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는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고, 중·고생이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시급은 성인기준의 90%로 법적인 보장은 되어있으나, 부모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현행법상 불법취업과 노동착취가 구조화될 우려가 있음

○ 청소년의 노동권과 경제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공약

- 근무시간, 주요 업무, 휴일·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청소년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정, 청소년 고용시 작성률 준수하도록 함
- 부모동의서 폐지로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인 취업 기회 확대
- 청소년 취업 금지 업종(유홍업, 육체적으로 위험한 직업 등) 지정으로 안전망 구축

□ 기대효과

- 청소년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불법 취업과 청소년 유해업종 취업을 차단하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음

새천년민주당

-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할 권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권리, 정보접근 권리 등을 보장

열린우리당

- ▶ (청소년의 권리 신장)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자치권의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 차별의 지속적인 철폐

※ 선거 연령 하향에 관한 당 비교

선거연령은 만 19세로 인하해야 한다.		
정당	답변	사유
한나라당	×	민법상 성년 연령과 매칭 필요
새천년민주당	○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선거연령을 만 18 세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열린우리당	○	선거연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18 세로 조정해야 함. 세계 100여 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으며 최근 점차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음. 18세는 공무담임, 운전면허취득,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8 세로 조정해야 함.
자유민주연합	×	현행 만20세 고수
민주노동당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인 평등 보통선거권 보장

-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찬성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 17대 공약사항에서 또한 청소년 정치·경제 참여의 보장이 정책으로 나와있지 않다.
- 열린우리당 또한 당의 입장은 18세지만 얼마 전 뉴스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 19세로 기존의 여타당과 똑같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선거공약 당시 그나마 있었던 청소년관련 정책 재고 이유를 어렵잖이나마 알 수 있을 듯하다.
-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모든 정당들이 18세 선거권 하향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보장받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 청소년 노동법 보호에 관한 의견

- 민주노동당에서는 독자적으로 청소년 노동법 보호를 주장한다. 청소년들은 아직 법 관련이나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슈화된 법이 아닌 이상 사장들에 의해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당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원내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서 17대에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그들의 관심 밖의 문제였는가를 확인해 보여준다.

3) 청소년인권 및 복지정책

민주노동당

▶ 소년교도소 내부 '문화의집' 설립

-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음. 이 가운데 천안교도소 내부에 '문화의집'을 조성했는데, 재소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따라서 재소청소년을 위한 '문화의집'을 김천교도소에 조성하고, 앞으로 소년원 등 비행청소년 수용시설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돼 있는 재소자들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문화욕구 유발 프로그램등을 강화. 기타 연극이나 음악, 미술, 무용 등을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 경우 전문요원 지도가 필수적.

-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 노래자랑, 장기 바둑대회 등 놀이 활동을 배려.

▶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의집' 확대 건립

- 서울 난곡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단계적으로 '문화의집' 확대 건립. '문화의집'은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기보다 동사무소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부산 범일5동 동사무소에 설립된 '문화의집'은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저소득층은 경제적 여건상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문화환경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욕구프로그램' 등을 중점 운영
- 문화환경 체험프로그램 : 각종 동호인 모임 지원, 문화토론의 장 마련 프로그램, 예술인과의 대화 마련, 도서 CD 비디오 등을 통한 소규모 감상기회 제공, 지역문화정보 제공,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
- 문화욕구 유발 프로그램 : 연극, 인형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회 등 공연 프로그램 유치, 그림 서예 사진 공예전시회 등 전시프로그램 유치, 영상 및 음반 비디오 공영회 녹화물 상영 등
- 또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지체 현상 및 빈곤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어린이 교실, 자녀양육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탈북자정책

- 현황 : 탈북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자가 이전과 같이 가족단위가 아닌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다양한 부류로 구성되어 가고 있으며 개인 단위의 숫자가 늘고 있다.
- 현재의 정책
 - 1) 재정적 지원
 - 1인당 평균 정착금 1700여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 초기 생활기반을 마련하

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취업지원

- 직업 훈련시 일반 국민대상의 직업훈련과 비슷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고용유인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2년간 월 70만원 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3) 정신적·문화적 적응지원

- 현재 하나원에서 기초적인 감성교육과 남한사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준이 낮으며 자본주의 현실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한 소비태도나 금전관리부분이 취약한 상황이다.

□ 개선방안 : 민주노동당의 탈북자 정책

1) 재정적 지원

- 정착금이 현실적으로 초기 생활기반을 마련할 만큼이 되지 못하고 있기에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 정착금 이외에도 직장을 가진 후에 보조급여(임금에 보충되는) 등의 지급을 통한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배정뿐만 아니라 거주를 원하는 중소도시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융자지원과 연고자가 있을 경우 연고자와 공동거주 할 수 있는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거 지원의 틀을 보다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은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남한 사회에 적응을 도와야 한다.

2) 취업지원

- 탈북자의 계층과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 관계법령의 미정으로 인하여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보다 강력한 고용유인을 위하여 고용사업주에게 세제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한다.
- 취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을 돋기 위하여 취업

후에도 적극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3) 정신적·문화적 적응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와의 연계 하에 지역 공동체, 직능 공동체 등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멘터링, 또는 후견인제도 등을 두어 남한사회에의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 일탈을 걷지 않도록 지원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 2001년 3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도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교육부의 행정조치등 후속조치가 없어 학교장들이 입교를 꺼리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이상에서는 청강생으로만 받아 정식 학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취학연령임에도 취학 못하는 경우가 약 30%에 달하며, 입학 후에도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색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도 30%정도에 달하고 있다.

- 공약 : 자녀교육 우리나라로 협약국인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명확한 행정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아동의 입교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학교 적응을 위해 교육청 단위로 한국어 교실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예비반 성격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 교육을 한다. 모국어와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한다.

▶ 청소년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 현재 청소년 긴급전화(1388)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신고와 폭력, 청소년가출, 고민상담 등 청소년의 보호와 상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법률지원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두 가지 다 청소년 보호나 극단적인 인권유린에 역점을 두고 있고, 청소년의 일상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상담과는 거리가 있음

□ 공약

○ 청소년 전용 법률 상담 전화 신설

○ 청소년 법률 상담 사이트 개설

□ 기대효과

○ 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 일상적 권리를 알려주고 보장

○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청소년 인권 침해를 예방, 피해를 구제하는 효과

▶ 아동 및 청소년복지

1. 학생복지서비스 :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

○ “학생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

○ 학교폭력, 가출, 왕따, 자살 등 학교 부적응 현상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학생복지에 기여한다.

2. 학생도 쉴 권리 있다 : 과다 학습시간 제한 제도 도입

○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노동시간을 제한해야 하듯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은 학습을 강요받지 않도록 한다.

○ 학교에서의 보충학습, 자율학습, 학원과외 등을 포함하여 일정 시간 이상 학습을 강요할 수 없게 한다.

○ 모든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은 저녁 9시 이후에는 교육활동을 금지한다.

○ 일정 시각 이전에 학생의 등교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안전한 청소년 환경을 위하여 : 복지경찰제도 도입

○ 가출 청소년, 학대받는 아동 보호, 유흥가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경찰업무와 복지서비스를 겸하는 복지경찰제도 도입한다.

○ 경찰 인력 중에서 단기간 사회복지학, 아동 및 청소년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거리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에 배치한다.

4.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동 : 아동종합복지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

○ 단순 보육서비스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아동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한다.

새천년민주당

▶ 청소년과 부녀자 보호를 위해 ‘시민자경단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재향군인회, 경우회, 공무원·교직원 퇴직자 등을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프로그램(‘自警團’)에 참여시키고, 참여자나 단체에 비용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의 공권력만으로는 청소년 및 부녀자보호에 역부족이고 사후조치로는 미흡하기 짹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안전프로그램에 유 휴인력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청소년·부녀자 대상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사후 엄단조치만으로는 작금의 위협상황을 막기 어렵고 학생·학부모 등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시민자경단을 통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지켜주는 ‘视线의 힘’으로 범죄동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非常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실종자 찾기 지원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실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보호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실종자를 ‘18세미만 아동’으로 국한한 현행 지원·보호체계를 개선하여 ‘아동 및 성인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종자찾기지원및보호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실종자 찾기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 실종자 전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전국의 보호시설 및 실종자 수용가능기관의 인적 정보종합 시스템 구축 및 신고 의무화 등 범국가적 실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탈선청소년들이 혼숙하거나, 성매매에 빠져들지 않도록 선도방안 마련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 정책 추진

-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변화 촉매제로서의 청소년육성정책 확대

- ▶ 권리 못지않게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책임, 남녀 평등가치와 소외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갈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화

열린우리당

- ▶ (해체가족을 방지하는 '산가족정책' 추진) 가정 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해체가족을 방지하는 등 신가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 체계 마련, 아동학대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확대
-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이혼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 ▶ (빈곤아동 Zero 정책, 빈곤여성 지원정책) 아동양육 부담 완화와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사업 확대 등 빈곤가정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 약물의 오·남용 및 청소년 폭력과 성비행을 근절하고 사이버 공간상의 청소년 유해 요소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 (청소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와 청소년 문화예술 학교교육 강화 등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청소년 문화 존(ZONE)'의 지정·운영
- 청소년여행벨트(Youth Travel Belt)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과과정 및 교재, 평가지표 등의 개발·보급

자민련

- ▶ 지역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확대 등 건전한 청소년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 ▶ 각 시·도 권역별 복수 이상의 유스호스텔을 확대하여 수학여행 및 여행 청소년·가족을 위한 염가의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근린 생활권 단위별로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문화, 학생문화를 선도하고 밝은 여가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 ▶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비 및 학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분석

○ 한나라당

- 17대 총선 공약 중 한나라당에서 청소년 인권이나 복지관련 정책은 제시되지 않은 듯 하다. “제 16대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만 해도 1.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2.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확충 3.청소년 1인 1단체 활동유도, 4.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5.청소년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체험기회 확대 추진, 6.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 통합 조정 및 강화, 7.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정책특별회의’ 운영 8. 청소년 사건에 관한 보호 강화 (성매매,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 추행, 청소년 유해물 차단, 학생폭력 예방과 가출청소년 선도, 청소년 유해환경 엄격히 규제, 폭력적-선정적 프로그램 방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청소년 신용불량자 사전예방) 등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닌 이번 총선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는 듯하다.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보면 다방면에서 청소년들의 인권 피해 사례를 집고 있다.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소년원 속 청소년'들의 문제나 '이주노동자 자녀'문제 '탈북자 청소년들'의 피해 문제까지도 대안점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다른 당에서 집어내지 못한 학교내의 문제점까지도 되짚어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본다.

○ 민주당, 자민련

- 기타 민주당과 자민련에서는 청소년 문화 활동에 주력을 보였다.

○ 새천년 민주당

- 독특하게도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청소년과 부녀자의 사전 사건 방지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범죄를 사전에 처단하는 식의 보호적 측면이 강한 정책을 제시했다.

▶ 총 평가!!!

- 갈수록 줄어들고 사라지는 청소년 관련 공약들을 보면서 이번 자료를 준비하는 한 사람의 청소년으로서 쓱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나라의 주역, 나라의 기둥" 이라며 기성세대들의 찬사를 받으면서도 정작 정책적인 행실에서는 한사람의 국민으로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재의 주역이며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게될 당사자들로서 국가의 정책과 함께 가지 못함이 애처러울 따름이다. 이 자료집을 마무리하며 17대 국회에서는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17대 국회에 바란다' 청소년성명서

임태훈

(청소년기획팀)

청소년 인권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성명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상황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왔다. 노동현장에서 임금을 떼이는 일이 부지기수고 학교에서는 강제적인 두발제한과 교복착용, 체벌 등으로 우리들은 신체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했다. 또한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교육구조는 우리 청소년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조항과 '국가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라는 유엔 아동권리조약에 따라 오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전시성 청소년정책과 보수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소외받아온 우리들은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대우받아오며 갖가지 인권을 침해당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우리들은 지난날을 반성하며 우리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17대 총선에서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를 약속한 정당들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정치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선거연령을 하향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우리 청소년들에게 폭력과 체벌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들의 인권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들의 인권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루하기 위한 청소년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나라만들기 프로젝트' 청소년기획팀

☞ 청소년 자치활동단체 소개

푸른이

아이두 Idoob.net

전라북도 청소년자치회

부산 함지골청소년운영위원회

대구청소년문화아케이드 우주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디스토피아 Distopia



▶ 푸
른
이
와
함
께

“푸른이(pureuni)”명칭

-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낸 단어> '푸른이'란 청소년을 표현하는 '푸르다(근불규칙 형용사)'와 '이(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를 합하여 만든 합성어로 청소년의 푸르고 싱싱함을 표현한다.

- <순우리말로서의 표현> 우리말에는 소년·소녀를 표현하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인남녀를 표현한 어른, 청년을 표현한 젊은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을 표현할 마땅한 우리말이 없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청년과 소년, 젊은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여성 청소년인 청소녀를 담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청소년·청소년을 포함하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밝고, 맑고, 푸르고, 싱싱한 이미지를 담은 '푸른이'라는 대안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남녀를 포함하는 평등의 단어> 현재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청년과 소년, 젊은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청소년이라는 단어에는 소녀라는 여성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청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HAPPY CHEONAN!

깨끗하고, 안전하고, 친밀하게..

moto : Youth "Happy 천안"

I. 사업추진배경

- 새로운 주거·상가 지역의 건설로 인한 천안의 급격한 팽창으로 전통적 공동체 약화
- 천안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 천안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청소년문제 부각



II. 목표

- "Happy 천안"을 통한 천안의 올바른 생활문화 형성
- "Happy 천안"을 통한 사회문제 및 청소년문제 해결
- "Happy 천안"을 통한 청소년중심의 자치활동 활성화

III. 기대효과

- 청소년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 극복
- 천안의 전통적인 공동체성 회복
- 천안시의 건전한 생활문화 형성

VI. 컨셉

"Happy 천안" 깨끗하고, 안전하고, 친밀하게

¶ 아이두 (idoon.net)

아이두 (idoon.net) 는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입니다. 디자인/기획/제작/관리 등 <아이두> 제작과정 전반에 정부당국이나 단체 등 기성세대의 도움 없이 청소년들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 생산의 주체가 기성세대가 아닌 청소년이라는 점, 기성세대에 의한 것이 아닌 청소년에 의한 자발적인 문화 컨텐츠 생산 공간이라는 점이 <아이두>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두>는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모여 있으며, 이들 전체가 <아이두> 운영과 기획에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두>는 하루 20만 여명의 청소년/기성세대가 방문하고 있는 국내 최대이자 유일의 청소년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입니다.

청소년을 상업적인 마케팅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기존의 어른 위주 청소년 사이트와, 대학입시 인센티브를 미끼로 청소년의 창의력을 착취하고 있는 기존의 광변 사이트에 절망한 것이 <아이두>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청소년이 주변인이 아닌 주체이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이 솔직하게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목표로, <아이두>는 99년 12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렇듯 <아이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어른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자, 청소년이 소외계층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여론형성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16만여 명의 서명을 이끌어 냈던 2000년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 - 자르지마! (nocut.idoo.net)', '외계어'에 대한 학술논쟁을 촉발시켰던 2002년 '언어파괴 이제는 그만! - 외계어 반대 캠페인 (broke.idoo.net)', 18세 선거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던 '아이두 대통령선거 - 18세 선거권 인하 서명운동 (vote.idoo.net)', 인권침해 비난이 쏟아졌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에 대한 교내 공론화를 촉발시켰던 2003년 'NEIS 폐지 청소년 캠페인 (neis.idoo.net)' 등의 운동이 <아이두>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펼쳐진 바 있습니다.

<아이두>에 모인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청소년 인권, 교육제도 개선 등의 여론을 쏟아지자 경원도교육청 등에서 청소년 유해폭력사이트로 선정해 학부모에게 홍보하기도 했고, 각급 교육청 교육위원회로부터 사이트 폐쇄와 주동자 징계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이두>는 2000년 6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최우수 청소년 권장 사이트에 선정된 바 있고, 2002년 서울YWCA로부터 최우수 청소년 커뮤니티 사이트로 선정되었으며, 네이트 등의

검색 사이트로부터 추천 사이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각종 관심사를 토론하는 여론광장 메뉴 '광장', 10대만의 국어사전 '아이두사전', 사진 또는 오에카키를 통한 자기표현 공간 '포토', 블로그나 교환일기 서비스인 '아지트',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쿨아이두', 친구들의 가치관과 꿈을 함께 공유하는 클립서비스 '사이비아이두', 10대만의 인터넷 방송국 '틴캐스트', 10대들의 신문 '매거진아이두' 등 10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고 만들고 싶어 하는, 즐기고 싶어하는 수많은 컨텐츠가 <아이두>에 담겨져 있고, 지금도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새로운 메뉴가 꿈임없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놀이터이자 휴식처이고, 여론광장이자 아지트인 곳이 바로 <아이두>입니다.

< 10대 독립 아이두 – idoo.net > – 지금 들어오세요!

❸ 전라북도 청소년자치회

전라북도청소년자치회는 지난 2003년 7월 1일 창립하였습니다.

처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서로서로 부딪히며 발만 동동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시/군 대표로 추천받은 학생은 21명이었으나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무지로 활동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이 조금은 혼들렸습니다. 그나마 청소년 위원회에 관심을 둔 위원들 나름대로 전국 워크샵도 참가하고 다른지역 위원님들의 자문을 통해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은 어쩌면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청소년자치회를 알릴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자치회 위원들의 개인 명함을 준비하고 자치회 위원 소개모집 자료도 마련하였습니다.

2004년 전라북도청소년자치회는 새롭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4월 10일 전라북도청소년자치회 홍보행사 '나를 말한다'라는 청소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나를 말한다' 이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가장 멋지게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첫 행사였는데 불구하고 기대보다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자치회위원들은 더더욱 단합이 되가고 있습니다.

참여도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이젠 청소년 위원회가 존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가는 중이고 조금씩 기반도 탄탄해져 가는 거 같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자치회는 문화·인권·홍보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각 분야별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문화 분과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문화의 수요증으로서 청소년 문화만들기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을 것이며, 인권 분과는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인식을 함께 하며, 이를 시정하는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홍보 분과는 자치회의 활동 지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단체를 알리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출범 1년째를 맞은 청소년자치회는 이에따라 조직의 탄력을 꾀하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청소년으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제한된 자격이 올해부터 사라지고,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치회를 알리고,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고 나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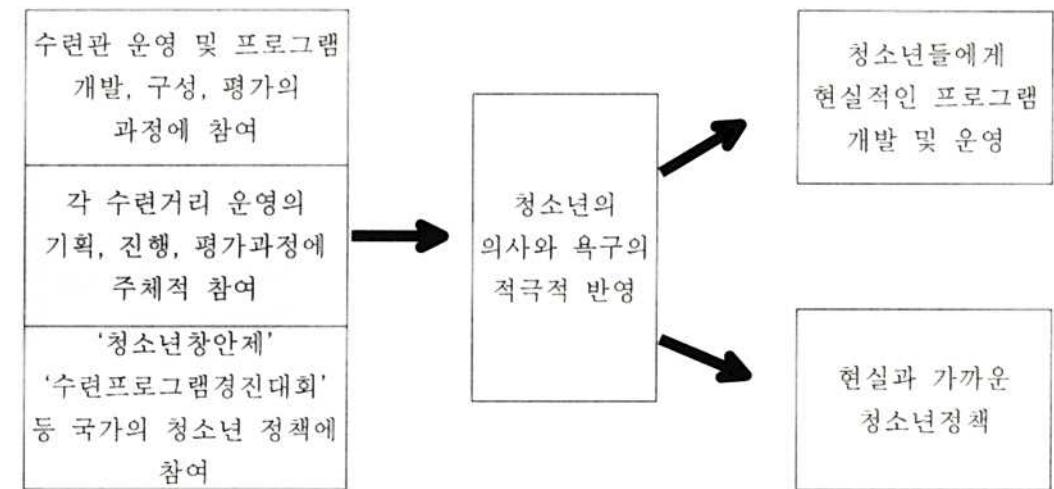
자치회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달 문화관광부의 도움을 받아 워크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올해부터 동아리 지원이 이뤄지는 등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등의 실무를 스스로 터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 자치회가 보다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청소년 자치회 JBYC 지켜봐주세요.

카페 : <http://cafe.daum.net/JBYC>

▣ 부산 함지골 청소년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목적



☞ 함지골청소년운영위원회는

- 수련관내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에 주최적 참여
- 국제교류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청소년들과 외국인과의 문화적 교류와 사회적 대인관계의 교량 역할
- 청소년정책에 능동적참여로 청소년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며 청소년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사회화 형성에 기여
- 함지골청소년위원회의 로고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파트너십을 지켜나가며 발전하자는
의미로 청소년(왼쪽)과 어른(오른쪽)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함지골청소년위원회의 별자취

■ 국제 교류행사

- 한국전통체험캠프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전통예절(다도), Mobile O/L, 초가삼간
- 제 1 회 국제교류 행사
세계 문화체험관 전시물 관람, 도미노게임(중,일 지도), 각국 전통의상체험
- 제 2 회 국제교류 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연단들기, 연날리기, 씨름, 공기놀이
- 제 3 회 국제교류 행사 - 부산국제영화제(PIFF) 특설무대
윷놀이, 제기차기, 상모돌릭, 한복체험, 투호
- 제 4 회 국제교류 행사
'춘향면'경상, 한지공예, 경단만들기, 각국 고전 경진대회



■ 토론회 및 대회 참가

- 청소년위원회리더십캠프, 프로그램경진대회, 지역대토론회



■ 영남 Workshop 개최

- speech 능력향상을 위한 PR과 모노드라마
- 청소년특별경연 '청소년위원회 구성과 발전방향'
- 자유토론 찬반논쟁 '선생님의 존댓말 쓰기'
- 영남지역권의 청소년위원회의 화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

■ 함지골, 밀양, 양정 합동 토론회

- 청소년의 현 실태와 청소년위원회의 현 상황
- 청소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위원회간의 연계방안 모색



■ '꿈'의 의식조사

- 청소년들의 꿈과 꿈을 위한 노력
- 청소년들의 문화향유의 실태조사
- 청소년들의 의식조사 -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

■ Y-Ting - 동아리 연합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연합 활동에 참여
- 동아리활동상에 문제나 함지골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개선사항 의견나누기

■ 전국 청소년 시설 견학

- 울산남구청소년문화의 집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 안중청소년문화의 집
- 원평청소년문화의 집
- 서울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스스로넷'
-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
-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미지센터'
- 문화관광부
- 대구수성구 청소년수련관

■ 함지골청소년운영위원회

<http://cafe.daum.net/hjgyc>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http://www.youth119.co.kr>

❸ 대구청소년문화아케이드 우주인 소개

2002년 봄, 우주인은 청소년거리축제 '만취성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으로 대구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자치 활동 / 교육활동 / 인권활동 등을 지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이다.

대학만이 희망임을 가르치는 학교, 집,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서 자유와 행복하게 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10대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만들어진 우주인의 신념은 바로 10대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문화, 교육, 인권 3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활동으로는 크게 거리에서 친구들과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청소년 거리축제 '아이 원주 광합성', 소비의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의 주체가 되는 '3.6.9. 청소년문화시장', 대구 지역의 청소년 문화를 한눈에 알아보는 청소년문화지도 '사방팔방' 제작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활동으로는 단편적인 정보교환에서 벗어나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하는 직업세계탐방 '거울아, 거울아 나는 커서 뭐가 될까?',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을 배우는 '인문학배움터', 수평적인 교육 관계를 중시하는 '가로배움터', 탈학교생들과 함께 하는 '검정고시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 인권부문으로는 인권문화제와 탈학교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만 18세 선거연령하향조정을 위한 청소년 인권문화제 18 열여덟'과 2003년 학교 안과 밖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뿜 더 월' 등 11월마다 인권기간을 정해 인권문화제를 진행하여 왔다. 또한 아무런 사회적 지지, 지원 체계 없이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면 학습권과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방치되어 있는 탈학교생들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구지역에서 어떠한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 요구하는 활동들을 진행중이다.

2004년 현재는 주요하게 '3.6.9.문화시장'과 '검정고시 공부방', '탈학교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자원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성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사회구조는 변할 수 있기에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자신의 인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모두들 화이팅!

홈페이지 : www.woojuin.org

e - 메일 : 053woojuin@hanmail.net

전화번호 : 053-423-7848 / 011-527-92879(사무국장 영주)

주 소 : 대구시 중구 삼덕2가 139-14번지 2층

후원계좌 : 087-08-039972-2(대구은행 신영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희망을 알고 싶다!

청소년단체 희망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펼쳐가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의 장입니다. 학생회 임원들, 동아리 회원들, 인터넷활동가들, 희망의 학교 지부 '희망대'에서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교육하고 육성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죠?

1. 희망 일상사업

:: 희망 아카데미

교육, 인권, 방송연예, 고궁답사, 청소년활동, 청소년광연회 전문 강의와 치열한

모둠토론 자신감 있는 청소년으로 거듭나는 강좌

:: 청소년 열린학교

청소년들이 직접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19개 프로젝트!!

다큐, 신문기자, 연극, 방송, 애니, 풍딩, 개그, 댄스, 영상제작, 풍물전수,

학생회 축제기획/축제홍보/축제이벤트/축제개폐막식



2. 희망 부서사업



:: 학교지부 희망대

학교 안에 (사)희망 지부로 현재 13개 학교에 동아리, CA로 활동

* 교내 활동 : 신입생환영회/인권찾기 수업/역사수업/집단상담/모둠토론 등

* 연합동아리활동 : 전체회원가입식/방종희망워크샵(캠프)/운영진교육/연합

농촌봉사활동/권리찾기 발표대회

:: 학생회지원사업부

중,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 교육, 지원사업

학교 간부수련회 지원, 리더쉽 강좌, 영상강좌 등의 교육사업 / 공연기획, 대동제, 이벤트, 홍보 등 축제 지원 사업 / 학생회 연합 LT / 학생회 회원모집 / 자료집 발간사업 (stu.heemang21.net)

:: 동아리지원사업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및 매체별 연합사업

동아리 강습지원, 회원모임등의 일상활동 / 동아리 미팅(대면식) / 품물, 영상연합 활동 / 자체 학교 /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영상제

:: 언론사업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 인터넷 신문

겨울기자캠프 / 청소년미디어스쿨 / 정기적인 기자모임

1318virus

세상을 화나 외침, 바이러스로 퍼트리자

홈페이지 : www.heemang21.net

주 소 : (140-8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8-1 황금빌딩 3층

전 화 : 796-2278 / 전송 : 796-7021/

이메일 : heemang@heemang21.net

❖ Distopia = Discuss + Utopia

토론?.....토론!

여러분들은 토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남에게 소리치고, 육박지르며 자기의견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모습들, 지루하고 떡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Distopia는 경원도 청소년 자원봉사에 소속된 원주시 고교연합 토론&봉사동아리입니다.
동아리 Distopia.

어찌보면 Utopia의 반대적인 의미로 오해하실 소지도 다분하지만, Distopia는 Discuss + Utopia에서 따온 말입니다.

1999년 6명의 회원으로 처음 결성된 Distopia는 'With Debate in Our Life(우리 생활 속에 토론이 함께 합니다)'를 모토로 지역 사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찾아보면서 이를 토론을 통해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6, 7기를 구성하고 있으며, 6, 7기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Distopia의 주된 활동 내용은 토론행동과 봉사활동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토론행동은 ·토론회 개최 ·5분 스피치 ·토론 교육 활동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토론회는 매년 2차례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토론회의 주제는 동아리 회원들의 견의 수렴과 원주지역의 문제점, 논의점을 찾아 조율 거치는 것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토론회 개최의 목적입니다. 가장 최근의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제로 토론한 바 있으며, 탁상 공론식의 말싸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후속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이외의 5분 스피치와 토론교육은 매주 정기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5분 스피치-개인이 자유주제를 선정하고 5분 내외의 시간동안 자신의 논리를 설명 혹은 주장하는 말하기 활동-를 통하여 개개인의 자신감과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매주 두 가지의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자체적인 토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서 머리만으로 하는 토론은 진정한 의미 없는 토론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정기적으로 굿네이버스와 연계한 재가복지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한지문화제

혹은 다른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Distopia의 토론행동과 봉사활동은 계속 될 것이며, 앞으로 Distopia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히 물론, 우리 지역 청소년의 요구가 지역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할 것입니다.

카페 : <http://cafe.daum.net/Distopia>

청소년 기획팀행사를 준비하며 우리는...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행사를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준비한 사람들이 마지막 페이지 한 귀퉁이에 끄적인 토론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 넋두리입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니 앞에 실린 글처럼 논리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행사를 준비 했구나 해주세요. 혹 마음이 통하였다면 한쪽 귀퉁이에 당신의 느낌도 적어보세요. 먼 훗날 우연히 다시 보게 되면 추억일 꺼에요.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에까지 안녕히 돌아가세요.

시험기간과 맞물려~^ ^*회의 시간 잡기 힘들었던 준비기간 동안 공부하랴~ 토론회 준비하랴 정신없던 우리 기획팀 식구들! 서로 각자의 맡은 일에 밤을 끌딱 세워가며, 아픈 몸을 이끌며 짧은 기간동안 애써준 우리 기획팀 식구들 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과 한판 씨름하느라 밤을 지샜던 영현이, 전치 8주(?) 다리 부상을 입으면서 토론회 준비해준 국진이, 사스보다 더 무섭다는 감기에 걸리면서 밤새워가며 준비해준 태훈이 저 멀리 고양시부터 마다하지 않고 토론회 준비를 위해 서울까지 왕래 해준 우리 공주병(?) 은영이, 내가 못 챙기는 부분 잘 챙겨준 강원도의 힘 장형이 모두 고맙다^ ^*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 회의 때마다 목에 힘줘가며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 작은 이야기들이 청소년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작은 밑거름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네요 ^ ^*

청소년들의 영원한 보배이신 작은 채구에 강한 파워 김영지 선생님, 이쁜이 김세진 선생님, 자상하신 이해연 선생님, 분석의 제왕 김경준 선생님 잘 하라고 응원해주신 권이종 원장님 감사합니다.^ ^*

김태우

함께하는 우리

청정넷

처음보는 친구들과 짧은 시간 안에 기획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실수라도 하면 어떻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어울렸고, 호흡도 잘 맞았다. 그 정?? 사실 이렇게 후기를 작성 할 만큼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매우 미안하다. 특히 내 파트너 영현이에게.. 영현아~미안해 우리 밥 먹자!^ ^*

태훈아~꼭 같은 학교 05학번 되는 거당 국진아~내가 말 안해도 사랑하는거 알지? 장형오빠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늘 열심이신거 같애우리의 영원한 옹 태우오빠 빨리 새언니 데려오세 요! 기획단 식구들 모두 모두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의원님..우리 청소년 많이 사 ·박은· 랑해주세요! 저도 국회의원 아찌들 많이 많이 사랑 할께요♥ 영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윤영현)
청소년이 당당한 그날
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입후보하던 시절
청소년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말이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무수한 청소년들이
억압받고 우리들의 주장이 단순한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17대 국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전달 할
것이다. 그리고 지켜 볼 것이다. 우리들의 권리를 우리들의 손으로 되찾을
"이.땅.의.청.소.년.들.이.당.당.한.그.날.까.지." 말이다. 우리 청소년들이여 어깨를 펴자! 그리고 당당하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말하는 "아이들" 이 아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오랜만에 토론회 준비를 맡게 되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아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 기획팀 사람들의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 나에게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뿐..... 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배워간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내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쌓겠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태우형님, 우리 기획단 팀들 그리고 개발원 선생님들 수고
하셨구요~감사합니다~^^아 그리고 저 대신 파워포인트 작업 해주신 정형이형~땡쓰요~^^

정국진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훌륭한 국회의원·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소
년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느라 고생한 기획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함께 고생해주신 김영지샘·세진누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이 살맛나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일하다가 지치
고 힘들 땐 슈렉2 를보세요. *^_^*디스토피아 선미 발표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슈렉(이장형)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
가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면서 얻은 교훈이다. 그동안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해온 나였지만, 대부분 생각만 하거나 말로만 했던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번 토론회는 어렵게 결심을 하며 시작했고 그 만큼 나는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면서 말보다는 행
동으로 더 많이 실천했던 것 같다. 실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토론회를 내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임태훈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일을 기획했음에 행복했다.

토론회 준비팀

■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복지정책연구실 실장)

김경준 (복지정책연구실 인권복지팀장)

김영지 (복지정책연구실 인권복지팀)

이혜연 (복지정책연구실 인권복지팀)

김세진 (복지정책연구실 인권복지팀)

박정희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

■ 청소년기획팀

김태우 (함께하는 우리)

박은영 (청정넷)

윤영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이장형 (슈렉)

임태훈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국진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세미나자료 04-S 02

출발! 청소년 행복한나라만들기 프로젝트
“2004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

인쇄 2004년 5월 22일
발행 2004년 5월 2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137-715
전화 02) 2188-8844, 8877
등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 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